



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온라인 스캠 등 공동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왕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왕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변명을

지행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왕 총리는 "디지털 안보에 힘쓰며 보

李대통령·왕 총리 공동회견 제주 소·돼지고기, 첫 싱가포르 수출

디지털·해운 등 협력 MOU... "싱가포르, 한반도 평화 노력 전폭 지지

李대통령 "국제사회의 밤하늘에 별"...왕 총리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건과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서로 배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의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는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정상 간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공동연구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물류·해운산업을 공동 선도하기 위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 등에 서명했다.

공무원 인제 육성과 인사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도 동반 성장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왕 총리님께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도 노력을 전폭 지지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러진 공식 오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지

정학적 환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작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별임을 증명해왔다"며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총리는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두 별이 싱가포르와 한국"이라며 "양국 국민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 아래 지난 8월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 방한에 이어 두 번째 아세안 국가 정상인 양자 방한"이라며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재봉 기자

갭투자 막히자 5대銀 전세대출 5천385억 급감 1년반만에 최대폭 ↓

10월 가계대출 2조2천769억 ↑ ...주담대 증가폭 1조2천683억, 1년만에 최소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도 2개월새 0.3%p ↑ ...연말까지 대출 절벽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사실상 갭투자(전세를 건 주택 매입)가 막히자,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관련 대출도 급감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역시 증가 속도가 1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은행 대출 창구가 계속 더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766조3천718억원)은 이달 들어 2조2천769억원 불었다.

9월(+1조1천964억원)의 약 2배지만,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이 절정이던 6월(+6조7천53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7월(+4조1천386억원)·8월(+3조9천251억원)보다도 적다.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조2천683억원(608조9천848억원→610조2천531억원)에 그쳤다.

급감한 9월(+1조3천134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작년 10월(+1조923억원) 이후 가장 적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5천385억원 뚝 떨어졌다. 9월(-344억원)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도 1년 반 전인 2024년 4월(-6천257억원) 이래 가장 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급

감과 관련해 "6·27, 10·15 등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전세 공급 자체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대출과 반대로 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사이 103조8천79억원에서 104조8천598억원으로 1조519억원 불었다.

잇단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가뜰이나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금리까지 최근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

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가 최근 높아졌기 때문이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0월 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제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 수준이다. 두 달 전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280%포인트(p), 하단이 0.230%p 높아졌다.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제 5년물 금리가 2.836%에서 3.115%로 0.279%p 올랐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610~5.100%로 상단이 0.110%p, 하단이 0.090%p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제 1년물 금리가 0.187%p 오른 탓이다.

집값 등 불안에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대출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관측이다.

심귀영 기자

예산 "728조 예산전쟁 돌입"

이재명표 사업·확장재정 놓고 격돌 전망

국힘, 지역화폐·국민성장펀드 등 정조준...與, '원안 사수' 의지

5일 공청회로 예산 국회본격 개막...내달 2일 시한 내 처리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각론에서는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바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러한 틀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는데, 야

당에서는 지역화폐 지원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에 맞게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야당이 깎으려 하는 지역화폐 등 예산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2026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전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약속(3천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전임 정부 시절 삭감됐던 예비비가 이번 예산에서 75%가량 복귀된 점을 들어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 들떠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심귀영 기자

국민의힘 "한미관세협상, 합의문 없는 깜깜이 협상문 공개해야"

한중회담도 공동성명 없이 사진만...정부, 北 비핵화 '허망한 꿈' 깨어나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했다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깜깜이 협상'이자 '묻지마 타결'"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 정부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라며 이갈이 따져 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패

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 "정부가 타결됐다'고 자평한 협상이 실상은 문서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수합도입 문제에 대해서 "핵심 기술과 건조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상태라면 이는

핵심 추진 승인이 아니라 핵심 논의 개시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 성명은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적대적 표현 사용에 대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는 개뿔'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했지만, 정부만 '평화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

며 "정부는 허망한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확고한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압도적 역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과연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논의됐는지 의문"이라고 질었다.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며 "정부는 중국이 비핵화 과정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봉 기자